

46.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2년 9월 2일

☐ 발의의원 : 이태손, 박종필, 전태선, 류종우, 황순자, 하중환, 박소영,
김정옥, 이재화, 권기훈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2년 9월 19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태손 의원)

☐ 개정 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제명)

-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안 제4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재정 지원, 자료의 제공 요청 등(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 지원(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전용주차장의 설치, 충전료 징수 및 감면(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 충전료심의위원회, 위임 및 운영위탁, 홍보, 포상(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제관)

□ 적법성 여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내용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에서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것과 보급촉진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에서는 시장, 지방공기업의 장,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 비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함.

법 제2조제2호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은 100분의 80 이상임.

시장, 지방공기업의 장,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 구입(임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임.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22. 9. 5.)

○ 지방공기업

- ① 대구교통공사 ② 대구도시개발공사 ③ 대구시설공단 ④ 대구환경공단

○ 출자·출연 기관

- | | | |
|--------------|-------------|--------------|
| ① (주)엑스코 | ② 대구의료원 | ③ 대구경북연구원 |
| ④ 대구신용보증재단 | ⑤ 대구테크노파크 | ⑥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 ⑦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 ⑧ 대구청소년지원재단 | ⑨ 대구문화재단 |
| ⑩ 대구여성가족재단 | ⑪ 대구오페라하우스 | ⑫ 대구사회서비스원 |
| ⑬ 대구평생학습진흥원 | ⑭ 대구관광재단 | |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 의무 구매(임차) 규정

○ 법 제10조의 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영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 전용차량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 안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등) 및 제7조(재정지원)에서는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양한 요금 감면과 주차 편의 등을 제공할 것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이는 법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운행 및 재정 지원

- 법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법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영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안 제9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부터 제13조(전용주차장의 설치)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수량 및 충전시설 설치 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법 시행(22. 1. 28.)에 따라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설치 의무자(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 비율로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충전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설치 비율 강화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주요 개정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의무설치 대상		주차면 100면 이상 ⇒ <u>50면 이상</u>	주차면 100면 이상 ⇒ <u>50면 이상</u>	500세대 이상 ⇒ <u>100세대 이상</u>
신축 시설	설치 비율	200면당 1기 이상 ⇒ 주차면 수의 5% 이상	100면당 1기 이상 ⇒ 주차면 수의 5% 이상	100면당 1기 이상 ⇒ 주차면 수의 5% 이상
기축 시설*	설치 비율	주차면 수의 2% 이상 (전용주차구역은 5%이상)	주차면 수의 2% 이상	주차면 수의 2% 이상
	유예 기간	1년	2년	3년

※ 충전시설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내에 설치 가능

* 기축시설 :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요 개정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개정 내용과 대부분 동일.
- 단, 공공시설 기축시설의 전용주차구역은 주차면 수의 5% 이상임.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기축 아파트 현황('20년말 기준)

○ 총 595,392세대의 95%(566,271세대)에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 기축 아파트 주차면수 : 566,271세대 × 94%* = 532,295면

* 국토교통부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18년) : 전국 아파트 세대당 주차면 비율(추정)

· 충전기 의무 설치 수량 : 532,295면 × 2% = 10,646기

· 기설치 수량이 5,516기로 5,130기 정도 추가 의무설치 필요 추정

규 모	계	101~300	301~500	501~1,000	1,001 이상	비 고
세대수	566,271	73,030	117,536	225,354	150,351	

※ 출처 : 2021 주택통계연감

[자료제공 : 대구시]

- 안 제15조(충전료심의위원회)에서는 시장은 충전료 요금 결정, 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음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6조(위임 및 운영위탁)에서는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구·군과 협의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이는 법 제15조(업무의 위탁)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임.

□ 검토결과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과 설치비율의 확대,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운행 편의 증진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강화**

- (대상시설) 100면 이상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구역 ⇒ 전수
- (주차시간) ※ 변동없음.
 - 일반차량 : 즉시 단속
 - 전기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차량 : 급속충전구역 1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부과(완속충전구역은 14시간 이상 주차 시)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현황

-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22. 1. 28.)으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이 단속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신고 및 위반행위 건수가 증가됨.

※ 개정전 과태료 부과 : 주차면 100면 이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제외)

- 연도별 위반 행위 건수

(단위 : 건)

연 도	계	과태료 부과	계도장 발송	월 평균	비 고
계	3,824	1,012	2,812	127.5	
2020년	854	125	729	71.1	
2021년	870	130	740	72.5	
2022년 1월~6월	2,100	757	1,343	350	

[자료제공 : 대구시 제공]

- 다만, 조례 시행에 맞추어 다양한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임.
- 또한, 설치 의무자(건물소유자)와 시설 관리자 등에게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여 유예기간 내에 법 규정에 맞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호의 전기택시 충전기 전기료 및 통신비 지원사업 중 통신비 지원사업은 무엇인가? ○ 기축시설인 아파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입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라며, 공용주차장의 경우 급속충전기를 확대하여 주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시설과 충전기 관제센터 간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임. ○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급속충전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